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위해 협력키로

국립환경과학원 윤성규 원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이원효 소장은 지난 4월 12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업무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증식·복원 연구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획, 서식지 파괴 및 유전자 다양성의 감소에 의한 번식력 저하 등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크게 증가(2004년 : 194종 → 2005년 : 221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협력키로 한 것은 의의가 크고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리산에서 인공 증식된 반달가슴곰을 대상으로 이유 단계부터 자연먹이 적응 훈련과 방사 전 자연 적응력 향상 훈련을 거쳐 자연에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준 연구기관이고, 서울대공원은 늑대의 인공수정 증식, 시베리아호랑이 및 두루미의 자연번식, 유전자 분석에 의한 암수 감별법 개발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번식·보전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밖에 국립환경과학원 멸종위기 야생동물 생태·복원 연구팀은 방사 야생동물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대공원 동물연구실은 생식세포(정자, 난자, 수정란) 냉동 보관시설, 유전자 분석 장비와 인공수정 및 유전자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 체결 후 구체적인 업무협력분야의 선정 및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실무협의체(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우선, 양 기관의 기초자료의 공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군 확보 및 증식 등에 대하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KEI, 유해물질 관련기준 '강화' 해야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화학적 기준설정 현황을 제시하고 안전성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제시돼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녹색구매 대상제품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서 이같이 밝혔다.

KEI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도 소비자와 밀접한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관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취급제한·금지 물질 지정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함에 따라 연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구매는 '환경마크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 제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등 7개 부문으로 총 107개 제품군, 환경마크 총 274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환경마크 대상제품 가운데 페인트, 사무용 목제가구, 건설용 자재 및 설비의 인증제품이 전체의 60%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환경마크 대상품목 가운데 유해물질 관련 인정기준을 포함하는 대상제품은 실내공기 오염과 관련된 품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직접적인 화학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제품들이 아직 다양하게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어서 대상제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과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 절약 등 일



반적인 환경 관련 기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유해물질 관련기준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107개 환경마크 대상 제품군 가운데 화학적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을 포함하는 제품군은 총 35개 제품에 달한다.

실제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174개로 전체 인증 제품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중금속류, 포름알데히드 등 소수에 국한돼 있어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심 물질을 인증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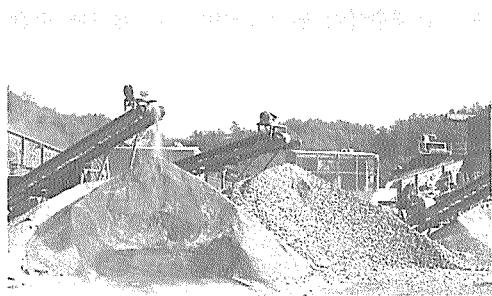
연구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녹색구매에서 화학적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의 장애요인으로 ‘정보부족’, ‘실질적 방법론 부재’ 등이 꼽혔고 그 밖에도 ‘경제적 인센티브 및 동기부여 부족’ 등이 제기됐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의 녹색구매의 화학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 제품 설계 및 생산자 침 개발’, ‘공공기관 녹색구매 지침서 개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 ‘녹색구매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했다.

건교부,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건설교통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난 4월 10일 제정·공포하였다.

이번에 공포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



에 관한 규칙’에는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골재를 생산·판매할 때에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페아스콘, 폐콘크리트)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골재로서 건교부는 이 규칙의 제정에 앞서 작년 하반기에 품질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 사용량’ 등도 마련하였다.

건교부가 공포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품질인증의 용도는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개 용도로 구분한다.

도로공사용으로는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등이 있고, 콘크리트용으로는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등이 있으며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의 용도로 구분한다.

▲ 품질인증서의 교부는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모두 합격한 업체에게 교부하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제도가 시행(2007년 1월 1일)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이 절약되고, 양질의 저렴한 골재 공급으로 건설업

체의 골재수급이 원활해지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360개)의 생산능력 및 기술의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간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1,000인/년)도 기대된다.

환경부는 후속조치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절약형 생태도시' 건설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 4월 18일 국회 현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 신재생 에너지 정책연구회, 에너지경제신문과 공동으로 '10개 혁신도시 및 행정복합도시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75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건설 예정인 행정복합도시 및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도시 전체를 에너지절약형 생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회장인 김태홍 의원의 축사와 건설교통위 박상돈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관련부서의 정책방향 발제와 관련기관 토론을 통해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신도시 개발의 정책제안, 에너지절약형 도시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의한 생태적인 도시설계방안, 이전 대상 175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전 에너지절약형 생태도

시 건설을 위해서는 개별건축물이 아닌 도시전체의 계획적 구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비전과 실천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10개 혁신도시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책비전을 구체화하고, 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 교육용 동영상 키드넷 탑재

환경부는 환경 교육용 동영상 99편을 키드넷(keed.net)에 탑재해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키드넷은 교사, 환경 전문가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유일의 웹사이트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 12월 개통한 이래 현재 12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총 20만 명이 방문·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드넷을 이용하는 환경교사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영상 자료는 다른 자료에 비해 환경교육에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키드넷에 탑재된 99편의 자료는 플래시,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홍보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흥미를 더한다.

키드넷에 탑재된 동영상은 BBC·한국광고방송공사·KTV·환경부 산하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로 환경교육에 적합하게 5~10분 내외로 편집됐다. 환경부 최선우 사무관은 "동영상에 대한 분류", "관련활동 자료", "묻고 답하기" 등이 함께 탑재돼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기존의 교과서와 병행하면 학습 효과가 배가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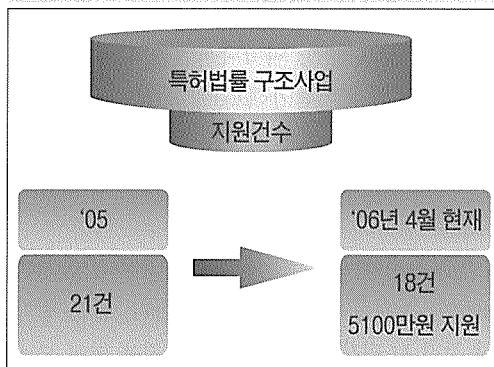
것”이라고 전했다.

동영상 자료들은 쓰레기와 재활용, 물, 공기, 생태계, 에너지 등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돼 있다. 최 사무관은 “이는 학생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실천이 환경보호에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참신한 내용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오는 5월 중에 학생·시민·교사 등 키드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환경소재의 동영상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지난 10여 년간 KBS·MBC·SBS·EBS 등 방송사들이 제작한 환경 관련 영상물에 대한 안내 자료집을 발간해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e-환경 교육을 위해 2010년 까지 키드넷을 포털사이트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최 사무관은 “키드넷을 환경교육 교사용 지도안 2000편, 환경교육 동영상자료 500편, 연간 이용자 100만 명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법률구조사업 호응 높아



특허청(청장 전상우)의 특허법률구조사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시 사회경제적 약

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률구조사업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 힘들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도 분쟁발생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청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지원건수가 21건이었으나 2006년 4월 현재 작년 전체 실적에 육박하는 18건이 지원되었으며 전체 금액으로는 5천 1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대상별로는 소기업이 9건 2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세개인발명가 8건 21백만원, 장애인 1건 4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지원대상에 포함된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발명가에 대한 지원실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발생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영세 개인발명가이며, 대한변리사회나 전국 지역지식센터(32개) 또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해서는 대한변리사회 특허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서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승소 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심판에 대해서는 200만원, 소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분쟁에서 승소했을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지원금액의 50%가 성공사례금으로 지급된다. ◀

덴마크, 수생환경 계획 긍정적 영향 보고서 발간

덴마크 수생환경에서 황과 질소를 줄이려는 20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 국립환경연구소(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해양과학자들은 덴마크 수생환경 행동계획(Danish Action Plans for the Aquatic Environment)에 따라 최근 덴마크 피요르드 해안, 연근해 지역에서 영양물질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출간했다.

1990년대 초부터 과학자들은 덴마크의 거의 모든 가정과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쳐 왔다. 이에 현재 황배출률은 덴마크 수역에서 22~57% 정도 감소했다. 그렇지만 질소집중률은 육지 배출원이 잘 통제되지 못 한 까닭으로 이에 미치지 못 한다. 질소 고정작용에 영향을 미친 기상이변도 부분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더해, 해저에서 유출되는 다량의 질소로 인해 적은 정도로만 질소분해활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과학자들은 지난 5년간 덴마크 해역에서 질소집중률이 떨어진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물에서 나타나는 집중률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피요르드와 연근해에서는 최고 44%까지 감소율을 보였는데 반해 카트갓(Kattegat), 순트(the Sound), 발트해 지역(the Belt Sea)은 이에 못 미친다.

이번 보고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영양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는 최초다. 보고서는 배출원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점오염원에서 영양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세계 최초 연료전지 시험열차 완성

대기중의 산소에 수소를 화합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열차를 JR 동일본이 개발하여 머지않아 시험차량이 완성된다는 것이 지난 4일 알려졌다. 연료전지는 지구 환경에 친화적이고, 미래 석유자원의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신에너지로서 주목되고 있다. JR 동일본은 실용화를 위해 시험주행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차량은 1량으로 편성된다. 65킬로와트의 연료전지를 2개 탑재하며, 시속 100킬로미터로 주행이 가능하다. JR 동일본이 2003년에 개발한 디젤발전기와 축전지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시험열차 'NE 트레인'을 개조하였으며 디젤 발전기 대신에 연료전지를 실은 형태이다.

NE 트레인은 정지 시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축전지에 충전할 수 있어 종래형보다도 약 20%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낸다. 발진 시에는 엔진이 아닌 축전지의 전력에서 모터를 회전시켜 출발하기 때문에 역홈에서의 소음저감 등의 효과도 있다.

NE 트레인의 실용차량은 2007년 여름 무렵부터, 나가노(長野), 야마나시현을 달리는 비전화(非電化)의 코미센(小海線)에 도입된다. JR 동일본은 장래적으로 연료전지 열차로 바꾸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시험차량에는 수소탱크가 탑재된다.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여 산소와 반응시켜 발생한 전기를 동력으로써 이용한다. 남은 전기 및 정지 시 발생하는 전기는 축전지에 쌓여 보조전원이 된다.

연료전지는 연료가 되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

을 별도로 하면, 그 자체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물만 배출한다. 에너지효율 또한 높다. 자동차에서는 세계의 유력 메이커가 시험차를 개발했다. 가정용 발전기 및 컴퓨터, 휴대전화의 전원 분야에서도 실용화를 위해 개발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 관계자는 주유소와 같이 수소공급 설비가 전국적으로 필요한 자동차와는 달리 열차는 수소공급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연료전지의 전문가이며 자동차 평론가 타테우치 타카시는 “연료전지 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현재 석유 및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제조하고 있는 것과 수소의 비축에 거대설비가 필요하다는 2가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열차도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연료전지와 수소탱크의 소형화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미국, EPA 플랜이 대기 오염 물질을 엄격하게 제한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188개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배출하는 많은 산업 설비에 대하여 오염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엄중한 기술 제어 방법에 대한 동의를 피할 수 없게 하는 2가지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 옹호 단체인 국립자원보호회의(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 NRDC)는 지난 3일 EPA의 부시 대통령 지명자인 대기 관련부처 수석 빌 웨르럼(Bill Wehrum)에게 미국 상원의 환경·공공사업 위원회(Senate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Committee) 회합을 주최하

기 이를 전 국제 규격 초안(draft proposal)을 제출했다.

웰럼의 수석 재임 기간 동안 NRDC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NRDC's의 청정 공기 감독관인 존 워크(John Walke)는 시기가 정치적으로 자극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PA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1995년도 정책은 단일 대기 오염 물질을 연간 10톤 또는 그 이상, 오염 물질 집단의 25톤 또는 그 이상을 배출하는 설비에서 오염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때때로 95%까지) 전략적인 제어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된 국제 규격 초안은 오일 제련소, 유해 폐기물 소각로, 화학 물질 공장, 기타 다른 유형의 설비 등에서 대기 정화 강령의 대기 독극물 프로그램(Clean Air Act's air toxics program) 하에서 오염 물질의 경미한 오염원으로 재분류 되도록 연간 한계치(threshold)를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주요 오염원에 대하여 더 엄격한 요구를 충족하기보다는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서 한계치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벤젠, 시안화물(cyanide), 석면(asbestos), 납, 수은, 염소 등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에 적용된다.

전미석유화학협회(National Petrochemical and Refiners Association) 회장인밥 슬로터(Bob Slaughter)는 이 법안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의 주요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행동 억제 방침과 정책 변화를 통하여 실제적인 배기가스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NRDC는 지역적인 EPA 관료를 비판하는 제언을 작년 12월 EPA 국제 메모로 제출했다.

EPA의 태평양 서남 사무국 대기 유해 물질 국장인 미카엘 브랜드로스키(Michael Bandrowski)는 산업 설비가 더 엄격한 기술적 제어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퇴보할 수 있고 연방 정부의 한계 치 이하로 대기 오염 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수석 멤버인 짐 제포드(Sen. Jim Jeffords)는 웰럼 공청회에서 주요 내용 조사를 약속했다. EPA는 대중의 건강 비용 지출에서 오염원에 대한 더 우호적인 청정 대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호텔들 환경친화적 변모

중국이 2010년까지 10,000개의 환경친화적인 호텔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텔 업계에서 생태인식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한 결과다. 통상부(Ministry of Commerce), 국가개발 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 NDRC) 및 4개 기타 정부부처는 최근 발간된 간행물을 통해 업계대표들에 에너지보존을 다시금 촉구했다.

동 간행물에 따르면 ‘그린 호텔’에 관한 국가 기준의 안이 만들어지고 곧 시행될 예정이다. 동서류에서는 10,000개의 호텔이 생태친화적인 관리시스템과 시설을 설치하고 물 및 에너지를 보존하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에너지절약기술과 제품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관리인 루 웬빈(Lu Wenbin)은 “조세와 정부조달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기술과 제품이 시장에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중국호텔연합은 3년 전 녹색호텔의 산업기준을 마련하고 발효시켰다. 동 기준에 따르면 녹색 호텔은 안전한 객실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고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현재 300개 이상의 호텔이 녹색 호텔 인증에 대한 검토 심사 중에 있다.

새롭고 보다 강력한 국가기준 마련에 참여한 중국호텔연합 고위급 관리인 장 준(Zhang Jun)은 신규 규제를 통해 에너지보존과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녹색호텔 인증호텔들이 현재의 에너지절약기술과 시설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자구의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13개의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국가출연기업 장궈 호텔관리기업(Jianguo Hotel Managing Company)의 왕 리(Wang Li)는 몇몇 현재의 에너지절약기술이 호텔산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물 재활용 등의 기술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영국, 조력 에너지 개발 지원

스코틀랜드 정부는 Orkney의 유럽 해양 에너지 센터(EMEC)에 조력 에너지 터빈 전시품 설치에 65만 파운드의 지원금 수여를 발표했다.

Scottish and Southern Energy's subsidiary Renewable Technology Ventures Ltd에 의해 개발된 ‘넵튠’ 프로젝트가 이 지원금의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심층수 재생가능 기술은 청정 에너지 생산 형태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이며, 특히 스코틀랜드의 해안에 잘 맞는다. 정부는 2010년까지 전력의 18%를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코틀랜드는 해양 에너지 발전소가 될 수 있다. 기술혁신이 핵심이며 우리의 연안 해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국무부총리 니콜 스테펜이 말했다. “넵튠 프로젝트는 스코틀랜드의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발이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더불어 DTI 및 Highlands & Islands Enterprise의 지원을 받는다.

탄자니아, 쇼핑용비닐백 사용 금지 조치

탄자니아 정부는 쇼핑용비닐백(plastic bags) 및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환경 조치(environmental measure)로서 아프리카 고산 지대의 농장 경영과 벌목(logging)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비닐 백, 플라스틱 음용수 용기, 음료수 용기 등의 수입, 제조, 판매에 대한 정부의 금지령은 올해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4월 알리 모하메드 쉐인(Ali Mohamed Shein) 대통령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다른 대안을 찾어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쉐인 대통령은 비닐 백과 용기의 사용 금지는 급속하게 악화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탄자니아 환경부처 관료들은 이러한 중앙 정부의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권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얼마나 유효한 효력을 보여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쉐인 대통령은 킬리만자로(Mt. Kilimanjaro)에서 나무를 벌목하는 사람들과 농부들에게 2달 이내에 킬리만자로를 떠나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는 해마다 91,300헥타르(225,000 에이커)의

나무가 무분별한 벌목을 통하여 소실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환경 악화 때문에 킬리만자로의 빙하가 2020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부룬디(Burundi), 우간다(Uganda), 르완다(Rwandan) 등의 지역에 있는 가축 목축업자들에게 과거 가뭄과 쟁들이 발생했던 북서부 탄자니아 지역의 물과 목초 이용을 중단 할 것을 권고했다고 쉐인 대통령은 밝혔다. 정부의 행동 강령은 가뭄으로 유발된 각 국가의 강제적인 힘의 분배에 따라 서부 아프리카 국가의 가뭄을 연장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탄자니아는 가뭄으로 인하여 특히 북부 지역에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

호주, 미쓰비시 자동차 탄소배출 대신 나무 심겠다

호주 자동차 제조업체인 미쓰비시가 자동차 배기ガ스 속의 탄소배출을 중화시키기 위한 환경보호 계획으로 남부호주 정부에 관용차로 판매하는 세단 380대당 호주 토종나무 25그루를 심겠다고 발표, 주목을 끌고 있다.

미쓰비시 호주법인은 지난 5일 애들레이드 동쪽 타일렘 벤드 근처에 있는 자사의 자동차시험장 시설에 나무를 심어 주정부 관용차에서 배출 될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의 로버트 맥케너리 CEO는 “탄소배출과 온실가스가 지구의 심각한 문제이며 책임있는 시민 기업으로서 미쓰비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쓰비시는 남부호주 환경을 위해 뭔가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일을 하며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